

# “종합심사 낙찰제 대형건설사만 유리”

## 내년부터 전면 시행 “업체규모 등 심사때 지역 영세업체 불리” 도내 건설업계 우려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종합심사낙찰제’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에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덤핑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등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중 세부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핵심은 입찰금액 외에도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

발주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행정자치부도 최근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영세 건설업체가 많은 지역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항목에 업체 규모와 기존 낙찰금액 등이 높은 배점을 차지할 경우 여전히 대형건설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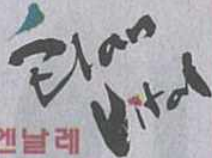
이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들은 지역과 중견·영세 건설업체 보호

를 위한 안전장치를 ‘종합심사낙찰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영세업체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대형 건설업체만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영세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가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2015 평창 비엔날레**  
PYEONG CHANG BIENNALE GJAX

주제전시 7.23~8.11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스키하우스

포스트 박수근전 8.5~9.1  
춘천 갤러리툰

DMZ별곡 8.1~8.11  
용평리조트 드래곤플라자